

##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의 길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갈등과 경쟁은 근대적 삶의 주된 요소이다. 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다. 갈등과 경쟁을 자본주의만의 속성으로 파악하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민주주의에도 갈등과 경쟁은 필수적 요소이다. 대표적 예가 선거라 할 수 있는데 선거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다. 경쟁과 갈등은 잘 사용하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격화되면 그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 정당들은 자신과 타 정당들의 차이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와 정치과정 등을 통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언론과 SNS 매체가 갈등을 조장한다.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하여 갈등과 경쟁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년에 걸쳐 진행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수십 년 만에 이루어내면서 우리 사회는 다른 곳보다 더욱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갈등, 이념갈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세대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사회에서 특히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되는 것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라 하겠다.

지역갈등은 흔히 박정희 정부시대부터 발현했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실상 그 뿌리는 수 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에서 전라도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그 후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차별은 이어졌다. 따라서 지역갈등이 하루 이틀 새 없어지리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뿌리 깊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아예 경상도, 전라도 같은 명칭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섞어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각 지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래하고 친교를 맺어야 하는 획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구역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동서를 잇는 교통 인프라, 예를 들어 대구-광주를 잇는 KTX 개설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세대갈등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은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고도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세대갈등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딱히 발견되지 않는 실정이다. 세대갈등은 우리사회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즉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인구 구성에서 노인층의 비율이 점차 많아지는데 거기서 세대갈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

양 선진국의 경우, 세대갈등은 주로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가 사회갈등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수혜자로서 ‘최하위층’과 ‘차하위층’ 사이의 갈등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정책을 확장하겠다고 장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 국민의 조세 부담율은 50%를 육박하는데 우리 국민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복지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득세의 전면적 개선이 우선인 것 같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의 소득세 과세는 전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공정한’ 조세제도는 사회통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명저를 쓴 저명한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역사상 존재했던 강대국의 조건으로 공정한 조세제도를 든다. 우리사회처럼 납부가 가능한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인구가 많으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아주 소액이라도 직접세를 납부함으로써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성장이 함께 하지 않는 복지는 절대 안 된다. 혹자는 스웨덴 식 복지국가를 주장하지만 스웨덴은 대표적 유모국가(nanny state)로 절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 가능한 인구 가운데 한 명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나머지 두 명은 생산자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거나 복지수혜자이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는 안정되어있지만 활기나 혁신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국가가 겪는 도덕적 해이와 과중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앞서간 복지선진국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복지를 확충하되 현명하게 해야 한다. 한 가지 해결책은 노인층이 더 오래 일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식으로 나라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대갈등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생애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각 세대가 삶의 각 단계에서 다른 세대들이 위치한 시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젊은이는 이상적이고 충동적이며 노장층은 삶의 지혜는 있되 소극적이고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한다. 젊은이는 노인층의 지혜를 존중해주고 노인층은 젊은이의 패기를 지지해줌으로써 상호보완이 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분열은 매우 심각해보이지만 실상은 이념이 아니라 가족사와 연관되어 있다.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시대적 폭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린했고 그러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기억들이 대단히 강하게 남아있다. 여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이 야기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져서 우리사회의 극심한 이념갈등을 야기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완강히 부정하는 인사들 가운데 많은 수는 우파에게 고통과 불의를 당한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이 낳은 군정 유가족과 상이용사, 그리고 좌파들에게 가족이 학살당한 인사들도 적지 않다. 그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기억들이 그들의 사고를 경직시켜 사물의 중층적 면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삶의

복잡다단한 단계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과 편향은 시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요즘 많은 평자들이 문화와 지적 분야에서 좌파의 장악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판과 문화 및 지식계에서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둘러싼 해석 문제와 종북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은 지난 수 십 년 간 왜곡되고 폐쇄적인 ‘민중민주주의’ 사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교과서가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을 서술해야 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나서서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치의 몫도 있다. 영국의 예를 보자. 영국도 1970-80년대에 좌파의 이념 대립이 매우 심각했고 국민들은 극심한 이념대립에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의 체질개선을 한 후 이념 대립이 많이 완화되었다. 블레어는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여 노동당에서 극단적 좌익을 몰아내었고, 보수당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노동당을 중도좌파 대중정당으로 만들었다. 즉 노동당을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좌측에서 중앙으로 ‘많이’ 이동시켰던 것이다. 한편 보수당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조금’ 이동함으로써 이념적 수렴이 이루어졌다. 물론 전적인 수렴은 아니지만 이제 영국사회에서 이념 대립은 더 이상 심각한 이슈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블레어는 용감하고 현명한 정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직은 발현되지 않았지만 미래 우리사회의 잠정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종적 갈등이다.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는데 다문화는 실상 각기 다른 문화들의 병렬적 공존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공존보다 더 강력한 응집력을 가진 문화이다. 일부 학자들은 ‘다문화(multiculture)’라는 개념 대신 ‘복(復)문화(polycultur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복문화’는 단순한 병렬적 공존이 아니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는 요소들의 혼합을 의미하며 전체의 합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의미한다. 복문화가 의미하는 것처럼 각각의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바로 다인종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대장정에 필수적 요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이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 공통의 가치가 실종되어 있다. 나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떨쳐버리고 개방적인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에게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과 애착이 약하다는 사실의 저변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지난 수 십 년간 우리사회를 장악해온 소위 ‘민중민주주의’ 개념이다. ‘민중민주주의’ 노선에서는 국가를 단순히 민중을 억압하는 폭력적 기구로 파악하는데 그러다보니 자연 공화주의에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일

제시대 이후 계속해서 권위주의적 국가를 경험했다는 사실도 공화주의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지와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유교는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公)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에서는 효와 충이 충돌하면 효가 충보다 우선적이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공인의 의무라는 개념이 확고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지, 만일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이제부터라도 공화주의적 시민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적 이익과 공익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명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자유’와 ‘변영’과 ‘나눔’으로 요약하고 싶다. 대한민국 건국 후 6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것은 자유와 변영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가 억제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성공하였다. 이제 ‘자유와 변영’에 더하여 ‘나눔’을 공통가치로 세우고 21세기를 헤쳐 나아갈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토론을 통해 상대편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과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 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을 존중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다. 우리는 또한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고, 승리했을 때는 패자에 대하여 아량을 베풀고, 패했을 때는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우리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는 우리 사회에 ‘페어플레이 정신’이 전무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교육과 계몽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서양 문물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지식인들이 교육과 계몽을 설펠듯, 지금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교육과 계몽운동을 벌여야 한다. 열린 마음, 세계를 향한 시선,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다각적 시각, 자국사가 아닌 비교사적 관점,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교사, 정치인, 그 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